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85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 2.

복지문화 위원회
전 문 위 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 2.
복지문화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김화덕 의원 외 7명
- 발의일자: 2022. 1. 25.(화)
- 회부일자: 2022. 1. 25.(화)
- 검토기간: 2022. 1. 26.(수) ~ 2. 3.(목)

2. 제정이유

-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 발생하는 차별을 예방하여,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원활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나.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안 제3조)
- 다. 구청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및 안 제5조)
- 라.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안 제6조)
- 마.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안 제7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정보접근을 지원할 행·재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차별을 예방하고, 원활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동안 의사소통은 사회 참여를 위한 필수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이 불편한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충분하지 않아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에 부족하였음.
- 따라서 의사표현 및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쉽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대체 의사소통을 위한 단말기 및 프로그램, 수어통역¹⁾, 문자통역, 점자자료²⁾ 등 다양한 편의 지원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서울, 부산, 경북, 울산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음.

□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조례 제정 현황

구분	법령명	시행일자	비고
광역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2020.10.5.	개정
	부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2019.1.1.	제정
	울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	2021.7.8.	제정
	대전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	2021.2.19.	제정
	충청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2021.12.31.	제정
	경상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2021.5.24.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2019.5.8.	제정
기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2021.3.18.	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2021.11.4.	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2018.11.15.	제정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	2021.7.9.	제정

- 또한 달서구 등록 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정신 장애인은 26,656명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 28,422명의 93.8%를 차지하고 있으며,

1) 수화언어에 대한 지원은 「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2021.4.12.전부개정)에 따라 수어통역센터 운영비(246,070천원, 시비), 파파파 수어교실(2,500천원, 구비)을 운영함.
 2) 대구시 점자도서관에 대한 운영비(243,150천원, 시비), 격년 복지달서(점자도서, 4,200천원, 구비), 매월 희망달서 소식지(점자도서, 9,600천원, 구비)를 지원함.

-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등록 장애인 중 심하지 않은 등록 장애인이 16,903명 63.4%로 정책의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대구광역시 달서구 등록 장애인 현황

(2021. 12 기준, 단위: 명)

장애유형	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합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계	28,422	16,631	11,791	10,825	6,446	4,379	17,597	10,185	7,412
소계	26,656	15,567	11,089	9,753	5,830	3,923	16,903	9,737	7,166
	93.8%	93.6%	94.0%	90.1%	90.4%	89.6%	96.1%	95.6%	96.7%
지체	11,231	6,884	4,347	2,346	1,560	786	8,885	5,324	3,561
시각	11,231	6,884	4,347	2,346	1,560	786	8,885	5,324	3,561
청각	2,757	1,627	1,130	545	293	252	2,212	1,334	878
언어	5,624	2,820	2,804	1,065	549	516	4,559	2,271	2,288
지적	232	168	64	124	90	34	108	78	30
뇌병변	2,331	1,440	891	2,331	1,440	891	0	0	0
자폐성	2,790	1,637	1,153	1,653	909	744	1,137	728	409
정신	300	259	41	300	259	41	0	0	0
신장	1,391	732	659	1,389	730	659	2	2	0
심장	1,195	688	507	883	496	387	312	192	120
호흡기	51	28	23	36	15	21	15	13	2
간	92	75	17	89	73	16	3	2	1
안면	177	123	54	6	2	4	171	121	50
장루.요루	34	17	17	17	7	10	17	10	7
뇌전증	134	87	47	13	10	3	121	77	44

-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다양한 의사소통방안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참여 및 의사소통의 권리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의 실효성이 높고,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④ <생략>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⑪<생략>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 구화,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사소통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학습에 필요한 의사소통도구를 개발하고 의사소통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발달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등을 통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담당 직원이 발달장애인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침을 개발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 의사소통도구의 개발·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